

포털의 지역뉴스 차별...쫓지자체로 문제 확산 “지역신문 위기=풀뿌리민주주의 위기” 인식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7월 24일 부산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제42차 총회에서 네이버의 지역언론 차별 중단 결의문을 채택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6월 18일 제주도의회에서 열린 임시 이사회에서 지역언론을 배제하는 네이버를 규탄하는 성명을 채택했다. (사진/부산시의회 제공)

전국 17개 시·도지사들은 네이버의 지역 언론 배제를 한목소리로 규탄했다. 시·도지사들은 7월 24일 부산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제42차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 총회'에서 '지방분권을 위협하는 네이버의 지역언론 차별 중단 및 제도 개선 촉구 결의문'을 채택했다.

앞서 전국 17개 시도의회 의장들은 6월 18일 제주도의회에서 임시회를 열고 '네이버 지방언론 배제 반대 성명서'를 채택했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전국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장으로 구성된 협의체) 소속 시·도지사들은 결의문에서 “네이버는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을 위한 공론의 장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을 인식하고, 지역민의 삶과 밀접한 뉴스를 다루는 지역 언론에 대한 차별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또 “정부는 포털의 뉴스 유통 독점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지역 언론 활성화를 위한 제도를 개선하라”고 밝혔다. 이들은 이어 “국회는 포털의 일방적인 지역 언론 차

별, 지역 정보 차단, 지역민 무시 등 퇴행을 바로잡고 지역과 중앙이 상생하는 미디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법률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전국 시·도의회 의장 17명으로 구성된

단체) 소속 의장들은 6월 18일 성명서에서 “네이버의 지역 언론 배제는 디지털 공론장을 왜곡시켜 여론 다양성과 지역민 알권리를 침해하고 나아가 지방분권과 지방자치라는 풀뿌리 민주주의 근간을

뒤 흔드는 일이라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지역 언론 배제를 즉각 철회하고 지역민이 뉴스를 주체적으로 선택할 현실적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전국시군자치구회의의장

협의회(시·군·자치구의회 의장 226명으로 구성된 단체) 의장들도 7월 16일 결의안을 통해 지방자치 실현과 지방분권 강화에 역행하는 네이버의 개선을 촉구했다.

▶3면에 계속

〈강원·매일·부산〉

제평위, 지역3사 네이버 제휴 자격 ‘인정’ 그러나 카카오 등은 꿈쩍도 안 해

포털이 지역뉴스를 의도적으로 배제하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포털 뉴스제휴평가위원회(이하 제평위)가 현재 네이버의 PC 콘텐츠 제휴사인 지역신문 3사(강원일보, 매일신문, 부산일보)에 대해 모바일 콘텐츠 제휴 자격을 인정했다.

네이버는 지역신문 3사가 제평위·네이버에 보낸 ‘네이버 콘텐츠 제휴 사지위 확인 요청’에 대해 지난 7월 5일 이같이 밝혔다. 네이버는 회신에서 “제평위는 ‘네이버·카카오 뉴스

제휴 및 제재 심사규정’상 콘텐츠 제휴사의 지위를 PC와 모바일로 나누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역신문 3사는(모바일) 콘텐츠 제휴사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지역신문 3사는 네이버의 모바일을 통해 뉴스를 서비스할 수 있는 길이 열린 셈이다.

제평위의 이번 결정은 ①지역뉴스 노출과 ②지역독자들이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매체가 생산한 뉴스를 볼 수 있어야 한다는 한국신문협회·한국지방신문협회의 요구가 일정부분 받아들여졌

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하지만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도 여전하다. 대표적으로 △3사와 지역신문의 네이버 제휴 문제 △카카오 등 ‘네이버 외 포털’의 지역언론 제휴 문제 △모바일·PC 뉴스 홈에 사용자 위치기반서비스 도입 △제평위에 지역신문 출신 인사 참여 등이 그것이다.

지역신문 3사와 네이버의 콘텐츠 제휴 관계는 2006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3사는 2006년 2월 지역신문 최초로 네이버와 ‘뉴스 콘텐츠

공급 계약’을 맺었다. 이후 2015년 6월까지 별도 계약서 작성 없이 1년마다 자동 갱신해오다가 2015년 7월 네이버의 요구로 “모바일은 아웃링크 한다”는 내용을 삽입해 재계약한 후 그대로 유지해왔다.

하지만, 네이버는 2016년 3월 100곳이 넘는 기존 CP사를 제평위 심사 없이 ‘모바일 인링크’ 방식으로 전환했으나, 특별한 이유 없이 지역신문 3사는 ‘PC 콘텐츠 제휴’ 상태로 남겨 현재에 이르렀다.

▶관련기사 3면

추경호 의원, 신문구독료 소득공제 대표발의 기재부-문체부는 여전히 “실무자가 검토 중”

정부의 신문 구독료 소득공제 도입 논의가 지지부진 한 가운데 추경호 의원(자유한국당)은 7월 24일 신문 구독료에 대한 소득공제를 신설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신문 구독료에 대해 도서구입비 및 공연관람비, 박물관·

미술관 입장료와 동일한 소득공제 혜택을 제공하고, 신문구독료가 소득공제에 추가된 만큼 공제항목의 한도액을 현행 10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았다.

추 의원은 “신문은 여론을 형성하고 토론의 장을 제공하는 등 공공재의 성격이 강하다는 점을 고

려해 소득공제 항목에 추가해 신문 구독을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신문협회가 신문구독료 소득공제 도입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제안했으나 관계당국(문화체육관광부, 기획재정부)은 ‘현재 실무자 검토중’이라고 밝히

고 있는 상황으로, 구체적인 논의가 진전되기 위해서는 시일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지난 7월 22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논의한 ‘2019년도 세법개정안’에는 구독료 소득공제안이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신문구독료 소득공제 관련
소득세법 개정안 발의 현황

발의 시기		공제한도 (연간)	발의 의원
18대	2009년	30만원	진성호
	2009년	50만원	전병헌
19대	2013년	20만원	윤관석
20대	2016년	30만원	
	2018년	지역신문 구독료 30%	강효상
	2018년	도서구입과 동일	김광림
	2019년	〃	추경호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회원사 “CMS는 가장 고마운 사업, 확대해야” 언론재단 “더 친절…찾아가는 서비스하겠다”

Q&A로 정리한 간담회 주요내용

한국언론진흥재단(이하 언론재단)이 신문협회 회원사를 대상으로 '통합 CMS' 지원 사업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7월 17일 한국프레스센터 12층 대강의실에서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는 신문협회가 지난 5월 10일 개최한 지방신문경영혁신전략 토론회에서 나온 제안에 따라 마련됐다.

간담회는 언론재단이 △언론사 선정 후 지원과정 △통합CMS 문제점 및 개선내용 △언론사 지원내용 △지원신청을 위한 언론사 준비사항 등에 대해 발표한 후 참석자와 질의 응답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언론재단은 이날 통합CMS 사업에 대해 “언론사에 가장 필요한 지원 사업으로 인식하고 있다”며 “향후 개별 신문사가 시스템 시연 등 전반적인 추가 설명을 요청할 경우 언론사로 직접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언론사 관계자들은 “통합CMS는 신문사 입장에서 가장 고맙고 피부에 와 닿는 사업인 만큼 지금보다 예산을 늘려 사업규모를 확대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일부 참석자들은 통합CMS 사업 참여시 자체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결코 적지 않은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간담회 주요내용을 Q&A 형태로 정리해 소개한다.

지원 대상 및 범위

Q. 언론재단 통합CMS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 및 범위는?

A. 통합CMS 지원사업은 대상 언론사당 5년 일몰제로 운영된다. 사업 시작 후 3년간은 구축 및 운영비를 지원하고, 4년차에는 운영비의 30%를 신문사가 자부담하고, 5년차에는 60%를, 6년차부터는 신문사가 자체 운영한다. 통합CMS 기본시스템과 분산조관시스템, 월 350만원의 클라우드 이용 비용은 언론재단이 전액 지원한다. 그러나 뉴스 콘텐츠(기사, 사진, 동영상 등) 원본관리 시스템 및 온라인 광고관리 시스템은 신문사가 부담해야 한다.

Q. 통합CMS 예산 규모는?

A. 올해는 27억 원 책정됐다. 내년 예산안은 현재 기획재정부와 협의 중에 있으며 올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편성될 것으로 보인다.

커스터마이징 비용 등 분담

Q. 매년 언론재단 사업 설명회 때 각 언론사 상황에 맞게 시스템을 변경하는 커스터마이징은 무료라는 설명을 들었다. 하지만 실제 지원 범위가 설명회 때와 달라 혼선이 있다.

A. 사업 설명회 때 통합CMS 시스템 지원은 무료라고 했으며, 언론사의 상황에 따라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안내를 했다.

CTS(컴퓨터신문제작시스템) 및 WCMS(웹 뉴스서비스 서버)는 지원범위가 아니라는 설명도 했다. 지원사업 신청서에 사별로 자부담해야 하는 항목도 안내하고 있다.(2017년 통합CMS 및 분산조관 시스템 구축 지원 공고 공고 및 신청서 안내 내용: 기본 시스템의 범위 외 사별 특화요구, 별도의 홈페이지 제작, 신문사가 기보유한 시스템과의 연동, 데이터 가공 등은 사별 자부담으로 실시해야 함)

Q. 통합CMS에 WCMS나 CTS를 연계하는 경우 호환성 문제 및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가?

A. 통합CMS는 공용 인프라 형태로 무상 지원하고, 통합CMS와 CTS 및 WCMS와의 연동도 재단이 지원한다. 하지만 오래된 CTS의 경우 호환성 문제로 인해 CTS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가 있다. CTS 업그레이드는 지원 대상이 아니므로 개별사가 해야 한다. 이외에 언론사가 사용하는 시스템의 업그레이드와 관련된 부분은 언론사가 자부담해야 한다.

시스템 업그레이드 등 보완대책

Q. 초기 구축 통합CMS는 2.0버전으로 업그레이드가 불가능한가?

A. 1.5버전에서 2.0버전 업그레이드는 무상으로 지원된다. 다만, 언론사의 요구에 따라 초기 버전을 많이 변형시켜버린 경우엔 무상

업그레이드가 불가능하다.

Q. 장애대응을 위한 비상연락처도 좋지만 각 사별 구체적인 대응 매뉴얼 공유(시간대별 대응 타임 테이블 등)가 필요하다. 인터넷 또는 클라우드 이용이 안 되는 등 장애 발생 시 대응방안은?

A. 네트워크 문제점에 대한 대응 방안은 고민해보겠다. 클라우드 이용 비용이 2000만 원이 넘어가면 반드시 조달입찰을 해야 한다. 현실적으로 1곳과 입찰하게 되면 다른 업체와 계약을 하는 것은 어렵다. 현재 LG U클라우드와 3년간 계약한 상황이며, 계약종료는 내년까지다. KT 등 다른 업체와 계약해 2중, 3중 백업 시스템을 만들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별도 클라우드 운영이나 내부적으로 임시 네트워크를 쓸 수 있는 방안 등을 검토하겠다.

표준화된 모듈 등 개발

Q. 개발업체 실무담당자들이 자주 바뀐다(그 담당자가 다 해준다고 약속했던 부분들이 담당자가 바뀌면서 무산이 되고 회의록을 공개해도 ‘우리는 그런 적 없다. 언론재단의 지원 대상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답변만 있음).

A. 모든 회의록은 언론사·재단·수행업체가 함께 공유하며, 현재까지 회의록에 기재된 내용은 협의대로 모두 완료된 상황이다. 수행업체는 기본 커스터마이징을 위한 개발 이외에 추가적인 개발에 관한 결정 권한이 없다. 언론사는 우선적으로 언론재단과 협의해야 한다.

Q. 기존 CTS에 맞춰야 하고 커스터마이징이 각 사별로 다르다 보니 개발업체에서 이를 다 수용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이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

A. 현재 국내 대부분의 신문사는 CTS 개발업체인 서울시스템과 양재미디어 두 곳의 제품을 사용하고 있다. 이 두 업체가 모두 컨소시엄에 참여해 CTS 연동을 책임지고

있어 문제가 없다. 단, 오래된 CTS의 경우 한글 버전 등의 문제로 업그레이드가 필요한 상황이다.

개발업체 역량 개선

Q. 사업 수행업체의 피드백이 원활하지 않다. 통합CMS 시스템 운영 시 장애 및 요구사항 처리 프로세스 개선사항은 있는지?

A. 올해 3월부터 고객응대팀을 신설해 24시간 고객의 요구사항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전용 홈페이지(요구사항 추적관리 시스템)를 운영, 언론사에서 요구사항을 올릴 경우 수행업체 및 언론재단, 언론사가 접수·처리·완료 사항을 동시에 관리할 수 있도록 유지보수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처리에 집중하고 있다. 현재 많은 문제가 해결됐다. 수행업체에서는 언론사 서비스를 위해 모두 3명의 인력을 총원할 계획이며 현재 2명을 총원한 상태다.

Q. 기술적인 문제가 있을 경우 개발업체에서 타 업체 및 언론재단에 책임을 떠넘기는 상황이 발생(3개 개발업체가 서로 자기 책임이 아니라며 타 업체에 떠넘김)하고 있다.

A. 통합CMS 시스템 지원 사업은 3개사 컨소시엄(AMI시스템, 서울시스템, 양재미디어)으로 공동 추진하다 보니 중복되는 부분에서 약간의 책임 문제가 발생한 부분이 있다. 그러나 최근 각 사별 업무와 책임을 부여해 책임 소재를 분명히 했다.

Q. 개발 공수(시일 및 투입인력)를 객관적인 지표로 안내해야 신문사에서도 계획을 세우고 대응할 수 있다.

A. 선정부터 초기 오픈까지 120일 기준으로 산정해 안내하고 있다. 또한 오픈 시나리오를 작성해 언론사와 공유하고 있다.

기타

Q. 오늘 간담회에 참석하지 못한 신문사를 위해 후속조치 계획을 갖고 있는지?

A. 신문사 요청이 있을 경우 개별이든 권역별이든 언론사로 직접 찾아가 설명하고 소통하는 자리를 지속적으로 갖겠다.

Q. 통합CMS 지원신청을 위한 언론사 준비사항은?

A. 첫째, 종이신문 중심에서 디지털 퍼스트로 전환하기 위한 언론사 내부 구성원들의 인식 전환과 통합CMS 도입에 대한 동의가 필요하다. 둘째, 재단이 구축해 지원하는 기본 시스템 외에 언론사가 필요한 추가 기능 구현을 위한 구축 비용 예산을 초기부터 책정해야 한다. 셋째, 디지털 퍼스트 도입에 앞서 ‘콘텐츠 유통 매뉴얼’ 등 언론사 내부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Q. 신문사는 통합시스템 사용 시작 후 4년차부터 비용을 부담한다. ①4년차부터 유지보수와 클라우드 비용이 각각 발생하는 것인지? ②클라우드 서비스업체는 바뀔 여지가 있는 지? ③5년차 이후 고도화 적용 비용은?

A. ①유지보수와 클라우드 비용을 4년차에는 각각 30%, 5년차에는 60%, 6년차부터는 신문사가 전액 부담해야 한다. 언론재단은 유지보수 비용을 최소화하는 것이 가능한지 검토해 보겠다. ②LG U클라우드에서 다른 업체로 바꾸려면 이전 비용이 발생한다. LG가 최저가로 입찰했으며, 현재 예산 등 구조상 쉽게 바꿀 수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경쟁 입찰로 진행되기 때문에 예산하기 어렵다. ③5년차 이후 고도화(업그레이드) 비용은 부담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다.

Q. 통합CMS 신문사 이전 비용은?

A. 언론재단이 지원하는 공용 인프라 부분은 재단이, 언론사가 개발한 부분은 자사가 각각 부담해야 한다. 일부 언론사가 시스템 이전 시(자사 개발과 통합CMS를) 통합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 개진이 있어 이 부분을 확실히 해둘 필요가 있다.

지역신문 홀대...어떻게 해결해야 하나

전국적·전사회적으로 포털의 지역뉴스 배제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지역 저널리즘 복원을 위한 해결 과제 또한 적지 않다.

포털의 지역신문 차별 문제에 대한 해결책과 함께 향후 지역 언론의 과제를 짚어본다.

차별문제 해결책

①지역신문의 콘텐츠 제휴 확대

포털 뉴스서비스에 지역 여론이 제대로 반영되기 위해서는 부산·매일·강원 등 지역신문 3사의 콘텐츠 제휴 입점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

PC기반 기준으로 네이버와 '콘텐츠 제휴'(가장 높은 제휴 단위)를 맺고 있는 120여 개 매체 가운데 지역신문은 단 3사에 불과하다. 모바일에서는 상황이 더욱 심각하다. 지난 2월 14일 네이버가 모바일 채널 뉴스 노출 알고리즘을 변경하면 서 모바일에서 구독 가능한 언론사

를 '서울에 본사를 둔 44개 사'로 제한함에 따라 모바일 서비스에서는 지역신문이 완전히 배제됐다.

카카오에서는 PC, 모바일 가릴 것 없이 검색제휴 외에는 지역언론 기사가 아예 하나도 없다.

각 지역에서 오랜 전통과 역사를 자랑하는 신문들 대부분이 포털 뉴스 유통에서 신생 인터넷 언론이나 전문지보다 못한 대우를 받고 있는 것이다.

해당 지역 매체별로 일정 수준의 자격을 갖춘 지역 종합일간지들의 콘텐츠 제휴 입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②콘텐츠 제휴 심사 시 지역신문에 가산점 부여

지역언론 활성화를 위해 일정한 객관적 기준을 충족한 지역신문은 포털 콘텐츠 제휴 심사 시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안이 있다. 일례로, 한국기자협회는 '한국기자상' 심사 시 지역매체의 경우 지역의 특수한 환경을 감안해 우대해 심사하고 있다.

③포털의 지역신문 뉴스서비스 제도·정책 개선 필요

포털 뉴스 제휴평가위원회의 제휴 심사 시 가산점 부여와 별도로 포털이 자체적인 정책 개선을 통해 지역 뉴스 서비스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포털이 채택할 수 있는 정책으로는

첫째,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국민들이 해당 지역 매체의 지역뉴스를 볼 수 있게 사용자 위치기반 뉴스 서비스 정책 도입,

둘째, 포털 메인화면 또는 뉴스 메뉴에 '지역 뉴스 판(가칭)'을 신설해 선택된 지역의 뉴스 서비스를,

셋째, 여론 다양성과 지역주민의 보편적 정보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해 최소 각 지역별로 정상 저널리즘을 구현하는 1~2개 매체는 PC 및 모바일에서 뉴스 서비스하도록 조치하는 등이다.

위 3가지의 경우에도 위 ②항과 관련해 마련된 기준을 충족하는 지역신문을 우선 고려할 필요가 있다.

④제평위에 지역신문 출신 인사 참여

제평위 구성에 지역일간지를 대표하는 단체를 추가해야 한다. 제평위에 참여하고 있는 15개 단체에는 지역의 목소리를 직접 대변할 수 있는 단체가 빠져 있다는 지적이 있다. 지역언론 출신 인사의 참여가 시급하다.

이에 대해 제평위 심의위원회는 지난 6월 14일 열린 전원회의에서 지역신문 인사 참여 문제는 운영위원회 소관이라고 결론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신문의 과제

①고품질의 지역밀착형 저널리즘 추구

지역신문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포털 탓으로 돌리기보다는 자구노력이 뒤따라야 한다.

지역신문이 추구해야 할 방향은 지역밀착성이다. 지역언론은 지역 현안에 대해 지역 언론만이 담아낼 수 있는 심층적이고 다양한 관

점이 담긴 뉴스를 생산해야 한다. 독자들과의 온·오프라인 활동을 확대해 독자와의 관계를 바탕으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과감한 혁신 실험도 필요하다. 재정 여건 등을 감안할 때 개별 언론사보다는 학계, 독자들과 공동으로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에 맞는 저널리즘 모델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②인터넷 뉴스 서비스에 대한 클린 정책 도입

포털 및 제평위의 지역신문 콘텐츠 제휴 시 가산점 부여 및 포털의 뉴스 서비스 개선정책과 별개로 지역신문은 인터넷 뉴스 서비스에 대한 클린 정책을 도입해야 한다.

현재 일부 지역매체의 경우 광고, 선정적 기사는 제대로 된 저널리즘을 구현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지역매체들도 ①어뷰징, 선정적 기사 차단 ②기사를 가리는 광고 등 차단 ③베끼기 기사 차단 등의 선제적 조치가 있어야 한다.

내년 언론진흥 정부예산안 206억 원, 지발기금 70억 원

올해 대비 진흥기금 19억 삭감, 지발기금은 평년 수준

정부부처 기금 예산안 1차 심의 결과

내년도 언론지원기금 정부 예산안 규모가 윤곽을 드러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기획재정부의 1차 예산 심의결과 언론진흥기금 예산은 올해(225억 원)보다 19억 원이 삭감된 206억 원, 지역신문발전기금은 전년도 수준(72억 원)인 70억 원으로 편성됐다.

당초 문체부는 언론진흥기금을 올해보다 7억 원 증액된 232억 원의 예산안을 마련했으나, 지난 6월 17

일 열린 정부예산안 1차 심의에서 기재부가 이 중 26억 원을 삭감했다.

이에 대해 문체부는 7월 26일 2차 심의에서 추가 필요 사업 예산 19억 원(뉴스콘텐츠생산지원 10억 원 및 미디어교육사업 9억 원)을 증액해 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심의 결과는 8월 초에 나올 예정이지만, 문체부의 요청이 반영될지는 미정이다.

언론재단 관계자는 "내년 정부

언론진흥기금 2020년 정부예산안 1·2차 심의자료 (단위: 억원)

구분	2019년 예산	2020년 예산안			추가요구 내용 및 사유
		요구	1차심의 결과	2차 추가요구(순증)	
□ 신문발전지원	225	232	206	19	
뉴스미디어진흥	111	111	101	10	뉴스콘텐츠생산지원 10억
뉴스유통구조개선	38	34	34		
언론공익사업	76	86	71	9	미디어교육사업 9억

지역신문발전기금 2020년 정부예산안 1·2차 심의자료 (단위: 억원)

구분	2019년 예산	2020년 예산안			추가요구 내용 및 사유
		요구	1차심의 결과	2차 추가요구(순증)	
지역신문 발전지원	72	70	70	30	기획취재지원사업 5억 증액 지역신문음부즈만사업 5억 신설 기사자료디지털화 지원 10억 증액 지역신문활용교육 10억 증액

예산과 관련해 8월 중 2~3차례 더 심의가 있는 만큼 언론재단이 당초

요구한 232억 원의 사업예산이 반영되도록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

하겠다"고 했다.

문체부, 지역신문발전기금 30억 증액 요구

한편 지역신문발전기금은 문체부가 요구한 70억 원이 1차 심의에서 그대로 유지됐다. 사업비를 축소할 경우 내년 사업추진이 어렵다는 의견이 반영됐다는 평가다.

문체부는 2차 심의에서 △기획취재지원사업(5억 원 증액) △지역신문음부즈만사업(5억 원 신설) △기사자료디지털화 지원(10억 원 증액) △지역신문활용교육(10억 원 증액) 등 30억 원을 증액해 줄 것을 요청했다.

포털의 지역뉴스 차별...쏠지자체로 문제 확산

여야를 막론하고 지방자치단체 및 의회가 앞다퉈 '네이버의 지역언론 배제 중단' 촉구에 나선 데는 지역신문 위기가 곧 풀뿌리 민주주의의 위기로 직결된다는 문제인식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지역언론·정치권·시민단체·지역언론학회 등도 올해 2월 이후 끊

임없이 포털의 조속한 지역언론 차별 개선을 요구해왔다.(신문협회보 7월1일자 제620호 1~3면 참조)

부산·창원·울산시의회는 6월과 7월 연이어 '네이버 지역언론 배제 중단'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으며,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회장협의회는 7월 16일 국회의 조속한 관련 법률 개정을 촉구했다.

'네이버의 지역언론 배제 중단 촉구 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는 경남도의회는 조례 제·개정 및 신문법 개정을 요구할 방침이다.

이처럼 지방정부·지방의회·시민단체·정치권 등이 포털의 지역뉴스 차별 문제에 한목소리를 내는 상황에서 향후 포털기업 및 제휴평가위원회의 행보가 주목된다.

▶1면에서 계속

지역신문 포털 노출 개선 요구 일지

6월 28일	창원시의회(제86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네이버의 지역언론 배제 중단 촉구 결의안' 채택
6월 28일	부산시의회(제278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지방분권에 역행하는 네이버의 지역언론 배제 규탄 및 제도개선 촉구 결의문' 채택
7월 8일	경남도의회 의장, 포털의 모바일 서비스 지역언론 배제를 막고 지역언론사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조례 제·개정 및 신문법 개정 요구
7월 10일	울산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임시회 상임위), 김미형 의원이 발의한 '네이버의 지역언론 차별 시정 및 신문법 개정안 조속처리 촉구 결의안' 원안가결
7월 16일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회장협의회(제220차 시도대표회의), '네이버의 지역언론 배제 중단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 원안가결
7월 24일	전국 17개 시도지사(제42차 총회), '지방분권을 위협하는 네이버의 지역언론 차별 중단 및 제도개선 촉구 결의문' 채택

회원사 동정

매경, '매경e신문 서비스' 제공

매일경제(발행인 손현덕)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독자들이 국내외 휴가지에서 모바일이나 PC로 신문을 볼 수 있는 '매경e신문' 이용 서비스를 제공한다. 종이신문 구독자가 전화(02-2000-2038)·이메일(reader@mk.co.kr)로 신청하면 한 달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접수기간은 7월 22~8월 21일이다.

중앙, 휴가지 배달 서비스

중앙일보(발행인 홍정도)는 7월 15일~8월 17일 휴가지 배달 서비스를 실시한다. 휴가지 배달 서비스 대상은 강원·경남·경북·부산·제주 지역 지정 호텔과 콘도이며, 구체적인 내용은 홈페이지(http://jilife.joins.com)에서 조화가 가능하다.

한경, 2019 구독경제 엑스포

한국경제(발행인 김기웅)는 9월 5~7일 삼성동 코엑스에서 '2019 구독경제 엑스포'를 개최한다. 전시 품목은 △옷, 식음료, 생필품, 꽃, 그림 등 정기배송 서비스 △동영상, 음악, 서적 등 무제한 이용 서비스 △생활가전, 뷰티용품, 자동차, 렌털 서비스 등 구독경제와 관련한 콘텐츠다.

연합, '잇! 우리동네' 출간

연합뉴스(발행인 조성부)는 7월 10일 우리 고장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고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단행본 '잇! 우리동네-우리 땅 곳곳에 숨어 있는 명소'를 발간했다. 전국 13개 취재본부 기자들이 2017년 11월~2019년 2월 약 500일간 각 지방 명소는 물론 역사, 문화재, 전통과 풍속, 지리, 특산물, 자연 생태 등을 폭넓게 취재해 담았다. 가격은 1만8000원이다.

강원도민, '김유정 문학상' 공모

강원도민일보(발행인 김중석)는 김유정기념사업회와 공동으로 '김유정 신인 문학상'을 공모한다. 공모 부문은 △단편소설 △시 △동화 3개 부문이다. 단편소설과 동화부문은 각각 200자 원고지 80~100장·30장 안팎이며, 시 부문은 5편 이상이다. 접수마감은 8월 23일이다.

강원, '2019 동곡상 후보자' 추천

강원일보(발행인 박진오)는 동곡사회복지재단과 함께 제14회 동곡상 수상 후보자를 추천받는다. 시상 부문은 △지역발전 △문화예술 △사회봉사 △교육학술 △자랑스러운 출향 강원인 등 5개 부문이며, 후보자 추천은 각 지방자치단체장, 의회 의장, 각급 기관·단체장, 강원도 내 대학 및 각급 학교장 등이다. 접수마감은 9월 6일이다.

경기, 2019 안산생생마라톤대회

경기일보(발행인 신향철)는 9월 8

일 안산 대부바다항기테마파크 일원에서 '2019 안산생생마라톤대회'를 개최한다. 참가종목은 △풀코스 △하프코스 △10km △5km이며, 접수마감은 8월 14일이다.

경남신문, 어린이재단과 업무협약

경남신문(발행인 최광주)은 7월 9일 본사에서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경남지역본부와 '경남도민과 함께 만드는 행복한 경남 '함께, 우리!' 언론공동캠페인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양 기관은 공동캠페인 전개 및 나눔 실천 후원자 소개·발굴을 통해 빈곤아동 지원에 협력할 방침이다.

국제, 대한전문건설협회와 업무협약

국제신문(발행인 박무성)은 7월 25일 본사에서 대한전문건설협회 부산시회와 '부산사랑 지역신문 보기'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대한전문건설협회 부산시회는 1900여 개 회원사를 대상으로 지역신문

보기 캠페인을 확산시켜 나갈 방침이다.

부산, '2019 부산바다마라톤대회'

부산일보(발행인 김진수)는 10월 6일 부산시와 공동으로 광안대교 일원에서 '2019 부산바다마라톤대회'를 개최한다. 참가종목은 △하프코스 △10km(커플런) △5km(슬로우조깅)이며, 접수마감은 9월 20일이다.

“독립 공공재 가치 수호”

서울신문 창간 115주년 기념식



서울신문(발행인 고광헌)은 7월 18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창간 115주년 기념식(사진)을 열었다.

고광헌 발행인은 기념사에서 “저를 비롯한 경영진은 독립적인 공공재로서의 서울신문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필요한 노력과 지원을 다 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이 자리는 우리 신문의 독립 의지를 확인하는 날이기도 하다”며 “지난 115년의 역사를 만들어온 서울신문의 소중한 가치를 여러분과 함께 지켜나가자”고 했다.

신문협회보

회장 이병규
사무총장 허승호
발행처 한국신문협회
서울 중구 세종대로 124 프레스센터 1302호
창간일 1985년 4월 15일
대표메일 webmaster@presskorea.or.kr

발행인 동정

변재운 국민일보 발행인은 7월 16일 본사 그랜드볼룸홀에서 열린 '2019 국민일보·쿠기뉴스 미래의학포럼'에 참석해 환영사를 했다.

박종면 머니투데이 발행인은 7월 23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19 머니투데이 히트상품&혁신 기술대상' 시상식에 참석해 인사말을 했다.

고광헌 서울신문 발행인은 7월 9

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북미 정상회담 전망과 한국의 역할'을 주제로 한 서울신문 평화연구소 창립 기념 세미나에 참석해 개회사를 했다.

정희택 세계일보 발행인은 7월 18일 본사 유니홀에서 열린 '제30회 세계일보 음악콩쿠르 시상식'에 참석해 축사를 했다.

최영범 아시아경제 발행인은 7월 10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2019 골드에이지 포럼'에 참석해 개회사를 했다.

곽영길 아주경제 발행인이 7월 12일 한국기원에서 열린 한국기원 임시이사회에서 신임 이사로 선임됐다.

권충원 헤럴드경제 발행인은 7월 10일 신라호텔 다이내스티홀에서 열린 '이노베이트 코리아 2019'에 참석해 인사말을 했다.

김중석 강원도민일보 발행인은 7월 20일 평창종합운동장에서 열린 '금강대기 전국중학교 축구대회' 개막식에 참석해 시축했다.

박진오 강원일보 발행인은 7월 27

일 양구 박수근미술관에서 열린 '박수근을 기리는 제6회 전국사생대회' 시상식에 참석해 수상자들을 격려했다.

임주호 경상일보 발행인은 7월 15일 롯데호텔 울산에서 열린 '제9기 비즈니스컬처스쿨' 수료식에 참석해 인사말을 했다.

김화영 경인일보 발행인은 7월 19일 경기도청 북부청사 경기평화광장에서 열린 '시원시원 물축제' 개장식에 참석한 후 안전시설을 둘러봤다.

더 높은 품질, 더 넓은 세계...

최고의 신문인쇄
KORINK가
약속 드립니다.



KORINK 한국신문인크(주)
www.korink.com